

월요광장



이승현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충남 천안의 국학원 한민족역사문화공원에 특별한 곳이 있다. 단군왕검, 을지문덕 장군, 이순신 장군,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태조 왕건, 김구, 나철, 무명 애국지사 등 인물상을 모아 세운 곳이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상 수많은 위인들이 나타나 우리 민족과 나라를 지키고 빛냈다. 그 중 일부를 한민족역사문화공원에 인물상을 만들어 모셨다. 역사 인물상을 한 곳에 모아 공원을 만든 곳은 한민족역사문화공원 뿐이다. 국학원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인 선도문화의 복원은 물론, 오늘에 맞게 재창조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학술, 연구 및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한민족 전통문화의 중심으로서 나라 민족

뿌리가 튼튼한 민족

과 인류를 살리는 길을 제시하여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철학으로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경영의 시대를 여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하였다. 한민족역사문화공원은 바로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를 알리는 생생한 교육 현장이다. 이곳에 오면 5000년 우리 역사가 인물상과 함께 영화처럼 머리 속에 전개된다. 인물상을 따라 가면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념으로 고조선을 건국하고, 수나라 군사를 물리치고, 왜선 수백 척을 침몰시키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3·1독립만세를 외친 역사가 펼쳐진다. 한 분, 한 분 상 앞에 서면 뜨거운 사랑,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이들이 시간을 넘어 말을 걸어온다.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곳을 둘러본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들이 써놓은 방명록을 보면 안다. 한민족역사문화공원은 그런 곳이다. 국학원이 한민족역사문화공원에 역사 인물상 공원을 만든 것은 우리 역사와 우리 위인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예우와 존경을 다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제 58주년 현충일을 맞아, 조국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이야말로 후손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하고, 그 숭고한 뜻은 결코 잊혀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충일에 대통령이 새삼 이렇게 강조한 것은 우리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그 유가족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뿌리를 잊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이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지 확실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발전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이들의 희생이 주춧돌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결코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은 나와 민족과 나라가 하나였다. 한마디로 모두가 주인이었다. 광상시에는 각자 생활해 나가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쳤다.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하였으니 세계에 유래 없는 의병(義兵)이 그 주인공이다. 다른 나라 역사를 보라. 적이 쳐들어오자 끝난 워던 학자가 민간인을 모아 전투에 참가한 예가 있는지, 그런 예는 거의 없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한 것은 근본에 ‘홍익’이 있었기 때문이다. ‘홍익’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철학과 문화의 정수이며, 국학(國學)의 핵심이다. 우리 선조들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 나아가 국가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했던 열원과 이상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대답이다. 조상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삶의 가치와 존재 이유가 바로 홍익이었다. 한민족이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다 같이 이런 나라를 만들어보자.”며 품었던 마음, 순수하고 힘찬던 그 마음이 바로 홍익이었다. 이것이 위기에 처할 때 우리 민족은 건너노소할 것 없이 분연히 일어섰던 것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수천년 이어져 내려온 홍익인간 이화세계 정신을 되새기자. 뿌리가 튼튼한 민족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법조칼럼



최정희
법무법인 가원 변호사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004년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재벌 총수와 가족 등을 포함한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제적인 페이퍼컴퍼니 설립 자체가 불법이 아닌 만큼 이를 회사가 탈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추징 등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한다. 페이퍼컴퍼니는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실

‘페이퍼컴퍼니’의 불편한 진실

체가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페이퍼컴퍼니는 회사로서 갖추어야 할 법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자회사를 통해 실질적인 기업 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유행회사와는 다르다. 그런데 페이퍼컴퍼니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후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없이 다음과 같이 악용되고 있다. 첫째, 개인이나 기업의 불법자금 세탁, 조세회피, 불법적 탈세 등에 이용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세수가 해외로 유출된다. 셋째, 외국인으로 가장한 한국인인 ‘검은머리 외국인’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외국에서 유입되는 것처럼 속여 주식시장을 교란한다. 마지막으로, 조세 형평에 반한다. 성실하게 사업을 하는 일반 기업인들은 많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반면, 조세피난처를 악용하는 자들은 적은 세금을 낸다. 이로 인해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인들은 부족한 세수를 채워야 하므로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

한편, 2001년 금융지주제도가 도입된 이후 설립된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지주회사들도 페이퍼컴퍼니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들은 독자적 사업 없이 은행, 증권, 보험, 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고서 자회사 지분소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장은 연봉 10억원 이상을 받으면서 10개 이상의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선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반면, 직접적인 주인이 없다 보니 경제와 간접도 거의 받지 않고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거나 투자손실이 날 경우에도 해당 자회사 CEO가 대부분 책임을 진다. 더군다나 10억원에 달하는 금융지주회장의 연봉은 어디에서 나올까? 아마도 돈 없는 일반 서민들의 금융수수료와 대출이자, 보험료 중 사업비,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적립된 돈 등에서 나올 것이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공격자금까지 투입되었으니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아파트분양을 할 때, 유명 건설회사는 대외적으로 분양의 주체인 것처럼 자기의 이름으로 분양광고를 하고, 분양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한다. 그런데 분양계약서상 분양회사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유명 건설회사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분양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명 건설회사가 시공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므로, 재판에서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회사를 상대로 해 승소하더라도 분양회사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 사실상 배상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거나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측면에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나 부존재확인회사와 같은 페이퍼컴퍼니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무법인 가원 최정희 변호사

기고



고광삼
뉴스1 광주전남지사장

“교육감 당선 전후로 몇몇 간부와 일부 교장들이 돈 봉투를 건네려 해 나무라며 되돌려 보냈습니다.” 딱 3년 전의 일이다. 2010년 6월9일 필자는 아전 신문에서 정말 신기하면서도 반가운 뉴스를 접했다. 이른바 전남도교육청의 ‘돈봉투 사건’을 다룬 기사였다. 1주일전 실시된 6.2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장만채 교육감 당선자는 “선거 일주일 전인

3년전 장만채, 그리고 지금의 장만채

5월26일경부터 당선된 닷새가 지난 7일까지 도교육청 일부 간부들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돈 봉투를 건네려 큰 충격을 받았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장 당선자는 “간부들이 돈 봉투 전달을(수십만) 이어져 온 관행이나 관례로 생각하는 듯 했다”며 “이를 보고 교육계의 부정 부패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고 놀라워했다. 또 “공무원들이 돈으로 나를 길들이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다시는 이런 행태가 교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끊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당시 이 사건으로 전국적인 유행어를 낳았다. 부하직원들이 ‘선(善意)’로 가져온 돈 봉투마저 폭로한 그의 용기에 찬사가 잇따랐으며 교육비리 척결에 대한 기대가 쏟아졌다. 기사시절 유달리 교육계 현장 취재경험이 많은 필자에게 당시 장 교

육감은 교육계의 구태를 타파할 참신하면서 도 움이있는 인물로 각인됐으며 한동안 ‘굿 뉴스’로 기억됐다. 하지만, 그날의 유쾌한 추억은 오래가지 않았다. 취임 2년도 채 못 돼 뇌물수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장 교육감의 모습은 충격과 함께 큰 실망감으로 다가왔다. 급기야 지난달 1심에서 법원이 배임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지막 그에 대해 갖고 있던 ‘혹시나’ 하는 기대감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허탈함마저 들었다. 일각에서는 장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벗어나는 형량을 선고받거나 최종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수사나 재판을 받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이는 분명 장교육감에

게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검찰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놓고 볼때 ‘도덕성’이 생명인 진보성향의 교육감으로서 그의 정치적 인 생명력은 이미 끝났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3년전 부하직원들이 건넨 ‘선의의 돈’을 부패로 규정한 그가 이제와서는 ‘선의로 받은 돈’이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공색한 모습은 가히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하다. 교육감은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지며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막중한 자리다. 그러한 중차대한 교육수장이 취임기간 내내 법정을 오가고 이중적인 잣대로 자신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현실에 전남교육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갑갑함을 느낀다. 무엇보다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이 과연 그러한 교육감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고 한숨만 나온다.

아픈 지구 살리기, 친환경 정착 힘 모으자

1972년 6월5일, 지구환경을 걱정하며 인류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인간환경회의 개최를 기념하여 세계 환경의 날이 제정되었고, 매년 각국에서는 이 날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날로 새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울머를 최악의 전력대란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50년 사이에 여름 시달림이 봄이나 앞당겨진 국내 현실은 41년 전 지구촌의 역사적 이벤트를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만든

다. 지진과 쓰나미, 토네이도, 구제역, 슈퍼박테리아, 일본 원전 폭발 등 미증유의 환경재앙이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환경오염에 따른 위기 정도를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환경위기시계’는 2012년 기준으로 9시 32분을 나타내고 있다. 예년과 같이 여전히 위험 상태다. 이는 전 세계의 평균 환경위기 시각인 9시 23분보다도 9분 빠른 것으로, 인류 멸망 시기를 나타내는 12시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2시간 28분에 불과하다.

사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재계나 우리 사회 한편에서는 환경 보호를 단지 규제와 간섭으로만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계속 늘어만 가는 일련의 자연 재해 사태에 대한 범인류적인 위기 의식과 맞물려 침체된 국제경기의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다는 ‘환경에 대한 역발상’이 친환경을 이 시대의 키워드로 관해 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해결 방안도 지속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신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정부정책 비전의 축으로 제시되고, 그린 비즈니스·녹색 경영이 기업 가치의 핵심이 되고 있다. 각계 각층의 기술개발 역시

푸르게 푸르게를 외치고 나아가고 있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먹거리라는 친환경식품이 대세를 이루고, 그 공급의 중심에는 친환경농업이 있다. 기후 변화와 같은 자연재앙이라는 현실 한편으로는 이에 대응하는 녹색 혁명이 바야흐로 본 궤도를 올라야 하는 시점이다. 친환경은 더 이상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지금 당장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인내해서 함께 그 길을 가야 한다. 정부의 인센티브, 학문적인 뒷받침, 기업의 윤리 경영, 소비자의 힘이 모두가 우리 자신들의 안녕을 담당할 수 있는 주동력이다. ▲장일주·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社說

잇따른 공사현장 인명사고 방관만 할 건가

광주와 화순에서 공사 도중 매몰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전모와 로프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 착용은 물론 토사 유실, 건물 균형 유지를 위한 작업 등을 소홀히 해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한 것은 근본에 ‘홍익’이 있었기 때문이다. ‘홍익’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철학과 문화의 정수이며, 국학(國學)의 핵심이다. 우리 선조들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 나아가 국가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했던 열원과 이상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대답이다. 조상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삶의 가치와 존재 이유가 바로 홍익이었다. 한민족이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다 같이 이런 나라를 만들어보자.”며 품었던 마음, 순수하고 힘찬던 그 마음이 바로 홍익이었다. 이것이 위기에 처할 때 우리 민족은 건너노소할 것 없이 분연히 일어섰던 것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수천년 이어져 내려온 홍익인간 이화세계 정신을 되새기자. 뿌리가 튼튼한 민족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울타리 설치하는 물론 땅을 비스듬하게 깎아야 하는데도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 있다. 두 사고 모두 관리자들이 사전에 안전점검을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는 점에서 전형적 ‘인재(人災)’가 아닐 수 없다. 업체와 작업 관리자의 안전의식 결여, 감독기관의 관리 소홀 등 사고가 일어나면 잠시 긴장을 하다 잊힐 만하면 다시 안전불감증이 도지는 게 우리 공사현장의 현실이다. 안전사고는 업체와 당국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상존할 수밖에 없다. 갑의 입장에서 하청업체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으니 안전은 뒷전인 셈이다. 업체들도 ‘안전이 곧 이윤’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책임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공중이용시설 흡연단속 호지부지되나

7월부터 실시되는 ‘다중이용업소 전면 금연정책’을 놓고 시작도 전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150㎡(45평) 이상 식당·술집·카페에 대한 흡연 단속이 실시되지만 지자체 단속 인원이 크게 부족해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7월1일부터 19일까지 청사 등 관공서와 150㎡ 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한다. 적발되는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원~500만 원이 부과된다. 광주의 경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다중이용시설이 1만1886개소에 이른다. 하지만 각 구청의 경우 담당자가 고작 1~2명뿐이어서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속을 겁내는 흡연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40%가 넘는 다. 청소년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여성흡연율도 늘어가는데 추세다. 담배가 마약만큼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다. 또 간접흡연의 피해가 직접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더하다는 점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연기를 뿜어낸다.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흡연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정부의 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흉내만 내는 단속은 절대 안 된다. 강한 의지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 물론 단속 인원을 늘리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스스로가 질서외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만 흡연문화가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이 시민정신을 재정립하는 첫걸음을 모두가 자각하자.

無等鼓

“미안해하지만,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슬퍼할 수 있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니까, 네가 나의 슬픔이라 기뻐.” ‘달려야 아비’ 작가 김애란의 ‘두근 두근 내인생’은 긴 여운이 남는 작품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회귀병에 걸려 열 일곱살 나이에 팔십세의 몸을 갖게 된 아들이, 부모보다 더 늙어버린 아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깊은 울림을 준다.

도시관이 처음 시행했고 2001년 시가가 풀리처상 수상작인 허파 리의 ‘앵무새 죽이기’를 함께 읽으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3년 한국도서관협회와 충남 서산시가 첫 스타트를 끊었다. 또 제1호 ‘기적의 도서관’으로 유명한 순천시도 2004년부터 ‘책 한 권, 하나의 순환’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안도현의 ‘연어’들이 선정됐고, 올해는 이외수의 ‘청춘불패’를 함께 읽고 있다.

책 읽는 광주



경기도 의정부 시민들은 ‘두근두근 내 인생’의 아들이 울고 웃으며 울 한해를 보내게 된다. 지난 2011년부터 시가 주 도한 ‘한 도시 한 책 읽기’책에서 찾는 ‘꿈’에 울화의 책으로 이 책이 선정된 것이다. 시민들은 첫해에는 심운경의 ‘나의 아름다운 정원’, 지난해에는 게그맨 김병만의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는다’를 읽었다. 한 도시가 하나의 책을 같이 읽는 ‘One city one book’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출발했다. 1998년 미국 시애틀에 공공

군포, 청주 등이 이어 광주도 뒤늦게 ‘One city one book’ 운동에 뛰어들었다. 전남대학교 도서관의 ‘광주가 읽고 톡(talk)하다’(lib.jnu.ac.kr)를 통해서다. 현재 박병신의 ‘소금’, 공선옥의 ‘그의 아름다운 정원’, 지난해에는 게그맨 김병만의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는다’를 읽었다. 한 도시가 하나의 책을 같이 읽는 ‘One city one book’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출발했다. 1998년 미국 시애틀에 공공

<p>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p>	
<p>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p>	
<p>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p>	
<p>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p>	
<p>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p>	<p>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p>
<p>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지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p>	
<p>※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